

가짜 진보는 차별을 못/안 없앤다

관련 기사 2, 3, 4, 8, 9, 10면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2면

수감시설, 외국인보호소,
요양병원...
코로나 취약계층 방치

2, 3, 4면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5면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6~7면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 학대

8면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9면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10면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도

한일위안부합의 폐기할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

김승주

1월 8일 고故 배준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고인 피해자 12명 중 생존 피해자는 현재 5명이다.

이용수 할머니, 고 궐예남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21명의 손해배상 재판도 진행중인데 같은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이 많다.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타국의 주권 행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관습법)를 근거로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익히 예상되듯이, 판결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주일한국대사를 조치(불러들임)해 항의하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혀 해결 안 된 위안부 문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저질러진 전쟁 범죄였다는 진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기껏해야 일부 군인 또는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현재 생존 피해자는 열여섯 분이다

군부대에 의한 일탈 행위로 보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 문제를 덮으려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와 그에 따른 배상(보상)과 달리 국가 범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은 피해자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또,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끝난 게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라고 공언한 정부의 입장보다 낫다.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항의하고 싸워 왔다.

그 성과 중 하나로,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 당시 현재는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1년

현재 판결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지급한 위로금 중 적은 부분은 피해자들이 수령하기를 거부해 문재인 정부의 수중에 남아 있고, 위안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한·일 관계 걱정부터 하나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위로금 10억 엔을 다시 일본에 돌려줌으로써 합의를 완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쳐지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모순되게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

또, 강경화 장관은 일본 외교장관(외무대신)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배상 이행은 전혀 촉구하지 않았다. 정부의 강조점은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외교부 논평) 하는 데 있다.

정부가 진정 판결을 존중한다면, 지

금 할 일은 위안부 합의를 고수할 게 아니라 일본에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압박으로 성사됐다.

미국은 경쟁국인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필요한 동맹국들이 과거사 ‘파워’는 잊고 현재의 제국주의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보다는) 한국 정부에게 주로 양보 압력을 가했다.

다음 주에 취임할 예정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당시 부통령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적극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 강화를 원하는 바이든을 의식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은 1월 11일 신년사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에 관한 언급은 않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문재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원하는 해법은 분명하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할머니들의 바람을 대변해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일 동맹의 골간을 유지하기 위해 그 바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김승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5.5평짜리 방에 8명씩 밀어넣고 방치했다. 6차 전수조사에서는 여성들을 제외했다.

그러나 결국 7차 전수조사에서 여성 확진자가 발견됐다. 이후 금세 같은 방 수용자와 옆방 수용자, 배식 담당 수용자까지 무더기로 확진됐다.

이런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감염 발생 경로를 제대로 규명조차 못 하고 있다.

재소자 인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구치소 측은 개별 수용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어기면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열토당도않은 협박을 하거

나, 수용자 사이에 접촉을 줄이겠다며 수용자들의 건강과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운동·목욕을 금지했다.

일부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상황에서, 확진자들을 수감시설 바깥의 병원이나 자가로 이송하기를 꺼리고 있다. 구치소 측은 방역을 위한답시고 수용자들의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하게 해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감시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방역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수용자들을 마구잡이로 옥죄는 권위주의적 미봉책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 풀어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시행에도 보수적으로 굴고 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났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용자가 60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2명도 있다. 데리러 올 가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다.

한편, 법무부는 1월 중에 교도소 수

감자 가격방을 두 번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정원을 7000명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전국 수감시설 실태를 볼 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일 듯하다.

“잘못 없다”는 추미애, 침묵하는 문재인

상황이 이런데도 책임자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며 회피하고 있다. 2021년 신년사에서도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여전히 “방역 모범 국가”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추미애 장관은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진 않았”고 “당시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마스크를 지급하긴커녕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하지도 못하게 하고 감염 의심자와 비접촉자를 한데 몰아넣고 방치한 게 “적절한 조치”였다니!

추미애는 황당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 시설들을 지은 게 과밀 수용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이 문제에서 전임 우파 정부들과 다를 바 있었나?

추미애는 구치소 과밀을 검찰의 과잉 구속수사 관행 탓이라고 했다. 기승전·검찰 개혁론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신천지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 때는 검찰에 이만희 총회장 과 교인들에 대한 무리한 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바로 추미애 본인이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의 핵심은 이처럼 방역 수칙을 어기면 처벌하고 구속하겠다고 으러대며 권위주의적인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억압과 계급 차별

이번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옥이 계급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인지도 잘 보여 주고 있다.

동부구치소에 있던 이명박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찍이 병원으로 피신

하는 특권을 누렸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는 수감 때부터 6~7인용 방을 개조해서 혼자 쓰고 있다.

애초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회에서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철창에 쉽게 갇히지도 않는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들은 대부분 하층민 배경의 사람들이다.

감옥은 재소자들을 사회와 격리·단절시킨다. 재소자에 대한 (경중을 가리지 않는) 사회적 편견도 만만찮다. 그래서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해묵은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 사회 질서를 유지·수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 수용자들을 함부로 천대한 배경이다.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만 이런 체제의 논리 아래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이주민 구금시설 집단감염 우려 법무부는 생명보다 통제를 중시한다

임준형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을 비롯해 이주·난민·인권·노동 단체들은 1월 4일 이와 같은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구금된 이주민을 석방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구금된 이주민과 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를 했다. 1월 11일 발표에 따르면 다행히 구금된 이주민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 결과 나온 보호시설 직원은 모두 음성이고 아직 110명의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혀 안심할 수 없다. 보호소 직원들은 계속 출퇴근할 텐데, 보호소는 언제 집단감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체류 기간이 끝났지만 출국하지 못해 미등록 신세가 되거나,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이 출국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 외국인보호소 과밀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에 389명이었던 수용 인원은 올해 1월



현 상태에서는 정부의 이주민 구금시설이 '바이러스 배양소'가 될지 모른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3주기 추모 집회

7일 현재 1065명으로 2.7배 넘게 늘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호소 안에서는 10평 정도의 공간에 5명에서 18명까지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현재 수용된 인원이 정원의 60퍼센트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1인당 수용면적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과밀화

법무부는 과밀화 방지를 위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심스럽다. 법

무부는 지난해 11월 27일 보도자료를 내 “국민 일자리 잡식을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배달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총 1294명을 단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자칫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도 했는데 완전한 위선이었던 셈이다.

보호소 내의 환경도 바이러스 전파에 매우 취약하다.

법무부는 일주일에 마스크 2~3매를 지급했다지만 개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피하려면 24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사실 불가능한 일로, 과밀을 해소하지 않는 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18년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외국인 1인당 1일(3식) 급식 예산은 5062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식단이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동절기에 온수는 1일 2회 아침, 저녁 1시간씩만 제공된다. 또한 의복이 한 벌만 지급돼 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입을 옷이 없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도 2주에 1회만 세탁을 하는 등 비위생적이다.

상근 의사와 간호사는 1명씩만 근무하며 진료 시 별도의 통역인이 없어 시설 내 구금된 다른 이주민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통역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기기 등 기본적인 진단기기도 없어 대부분 문진에 의존하고 있다. 외부진료를 받으려면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오랜 기간 구금된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큰 부담이다. 요컨대 외국인보호소 구금 자체가 전염병에 취약한 기저질환을 앓는 것이나 다름없다.

외국인보호소를 폐지하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을 석방하라는 요구에 대해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는 것을 볼 때 이주민들이 돌아다니다가 감염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보다는 구금 이주민들을 잠재적인 감염 전파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구금된 이주민 대부분은 노동자였을 것이다. 직장에 매여 있는 노동자들이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만약 주거가 일정치 않은 이주민이 있다면 그것은 단속과 장기간 구금 탓일 것이다. 또한 이주민들을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체류 자격 또는 미등록 체류로 내모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무부는 가뜰이나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탓하며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이주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장기 구금으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된 이주민에게는 정부가 안전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 될 일이다.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이명박이 은근슬쩍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을 보면, 이주민의 석방을 거부하는 것은 계급 차별적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구금된 이주민은 단순히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뿐 이명박 같은 범죄자도 아니다!

법무부의 태도는 10명이 사망한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보호소에서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일한 행동지침이 “재소자 탈출 방지”뿐이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웠다. 법무부는 지금도 구금된 이주민의 집단감염 위험보다 이주민 억압

과 통제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더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의 체계적 이주민 차별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기업주들이다. 예컨대,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체류하거나 작업장을 이동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시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그 폐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준 가장 최근 사례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이었다. 단속추방이라는 억압 수단이 없다면 고용허가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주 규제는 인종차별을 조장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도 낳는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와 정착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진실이

다. 또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들을 살리는 데 압도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대응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원인이다. 기업주들은 지원을 받아도 경기가 좋아지길 기다리며 투자를 아끼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재신청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 했다. 추방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난민들은 필사적으로 머무르려 할 텐데, 정부는 단속추방과 외국인보호소 구금 같은 강압적 수단을 더 이용하려 들 것이다.

즉,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야만적인 국경 통제와 인종차별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기구다. 그래서 이름과 달리 감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직 지배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국경 통제와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에 반대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해 수용자 전원을 석방하고 외국인보호소는 폐쇄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용어 해설

★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짝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 연세대 악질 청소년영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중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상대적으로 보관과 운송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 그 개인들로서는 일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계 보건 기구(WHO)는 2021년 내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전체 인구의 80퍼센트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백신의 생산·분배·접종 속도가 턱없이 느리기 때문이다. 백신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전체 인구의 80퍼센트가 접종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보다 짧다면 헛바퀴 돌듯 감염이 반복될 수 있다.

화이자는 최근 백신 생산 목표치를 54퍼센트나 높였는데, 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10억 명분만 생산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년 동안 15억 명분을 생산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고, 모더나의 생산 능력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말처럼 원료 물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제 생산량은 대폭 줄어 들 수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면서 나라별 불균형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WHO는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해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개별 계약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윤 경쟁에 혈안이 된 제약기업들과 제국주의적 경쟁에 사로잡힌 선진국들은 이런 호소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현재 보급된 백신들은 감염이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지만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사망자를 줄일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의 확산 자체를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라별 백신 접종의 불균등성은 일부 지역에서 사망자를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백신의 보급과 접종에도 난관이 많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보급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백신이 병원에 도착한 뒤 접종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량이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백신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가 물량이 부족하자 접종 간격을 늘리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각각 3주,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2차 접종 시기를 미루는 대신 1차 접종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두 백신은 한 차례 접종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조치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요양병원(위)과 동부구치소(아래): K방역?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방치하다가 더욱 악화시키기까지 했다



백신 보급을 근거로 한 낙관들이 있지만 팬데믹은 오히려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면역력이 없어서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매일 1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다. 그중 4000명은 미국인이고 1000명은 영국인이다. 독일에서도 일일 사망자 수가 700명을 넘겼다.

미국의 한 의사는 의식이 멀쩡한 고령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서 더 젊은 환자에게 주는 일을 매일 여러 차례 해야 하는 고충을 공개적으로 털어놓기도 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호흡곤란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겪으므로 사전에 고용량의 진통제와 진정제를 투여하는데 이때 환자는 이미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알게 된다. 이런 일을 매일 수행해야 하는 의료진들도 물리적·정신적 고통으로 탈진하고 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5000만 명을 넘기면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예측했는데 불행히도 예상이 적중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긴 변이 코로나바

이러스는 감염 속도가 훨씬 빨랐고, 이 나라들에서는 강력한 외출금지령이 떨어졌다.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관광객에게서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수천 명을 넘어 도쿄를 중심으로 긴급사태가 선포됐다. 중국에서도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자 시진핑 정부는 주민 2200만 명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높아지면 병독성은 약화된다는 이론은 이미 40년 전에 틀린 것으로 증명됐다. 충분한 숙주가 있다면 감염력과 병독성은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인류의 불가피한 노력이 감염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의 '자연선택'을 촉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변이가 늘어나다 보면 백신이 무력화될 위험도 있다.

요컨대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유지돼야 할 뿐 아니라 의료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여전히 중요하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민간병원 국유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방역 조치가 지속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소득 지원 없이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결국 방역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낸다. 백신의 합리적인 생산과 분배도 매우 중요하다.

구치소, 요양병원

한편, 국내에서는 매일 1000명을 넘던 감염 확산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피해는 만만치 않다. 특히 구치소,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정'이니 '정의'니 그럴듯한 말을 아무리 늘어놔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부의 본색이 드러난다.

비좁은 감옥에 정원보다 많은 사람들을 밀어넣고 그 흔한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변명이랍시고 내놓은 답변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염의심자와 비접촉자를 모두 한방에 밀어넣고 2~3주를 그냥 보냈다. 사회에서 격리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려운 구치소의 현실이 얼핏 드러났다.

요양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왔지만 정부는 '알아서 잘하라'는 것 외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원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간 입원한 노인 환자들이 많다. 정부는 안 그래도 감염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을 일반 병원의 절반도 안 되게 유지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끼려는 것이다. 입원환자 80명 당 의사 두 명, 입원환자 6명 당 간호사 한 명만 고용하면 요양병원을 열 수 있다. 간호사 인력의 3분의 2까지는 임금이 더 적은 간

호조무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교대근무를 고려하면 사실상 의사 한 명에 간호사 너댓 명이 100명 가까운 환자를 돌봐야 한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런 병원이 전체 병상의 43퍼센트(30만 2840개)나 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지만 간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가족들에게 간병 비용이 전가되다 보니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어렵다. 당연히 노동자들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다.

지난 두 달 동안에는 병실이 없어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생겼다. 한국의 공공병원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일일 확진자가 수백 명씩만 늘어도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고려하면 치료도 못하고 사망한 환자 수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치료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병원으로 옮겨주지 않았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숨졌다. 정부는 이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병원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코호트 격리)를 내려 왔다. 사실상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제물 삼아 감염 확산을 억제해 온 셈이다.

겨울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팬데믹이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상황도 다시 악화되기 쉬워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은 감염 확산이 진정되는 조짐이 보이자 그때서야 얼굴을 내밀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 내용도 '경제', 즉 기업 이윤 확보에 압도적인 강조를 뒀다. "터널 끝이 보인다" 하며 심부름 낙관을 퍼뜨렸지만, 세계적 상황을 보면 백신의 보급과 효과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여전히 많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생계 지원이 여전히 핵심적인 조치여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필수 노동자"의 "노고를 새롭게 깨달았다"지만 지원 대책은 없다. 공공병원과 인력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듭돼 왔지만 묵은 채하고 있다.

여당 정치인들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폈는데,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이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재정 지원을 아끼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고 거리두기 기준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정부의 오만한 스타일을 보건대 방역이 실패하면 또 일부 집단에 대한 비난과 마녀사냥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집회 금지 등 권위주의적 조치도 강화될 수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광범한 대중의 삶을 지킬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공수처는 정치적 부패를 없앨 수 있을까?

김문성

1월 4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초대 처장에 내정한 판사 출신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을 지키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문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험난하기 그지없던 공수처장 임명 과정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사실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 조문에 남긴 것)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강행했다.

판사 출신이라지만 김진욱은 기업주 등 권력자들의 변호와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악명 높은 김앤장의 변호사 생활을 더 오래한 인물이다. 문재인은 주류 정치권이 무난하게 수용할 만한 인사를 추천한 듯하다.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말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법질서는 민주당도 부패 처벌에서 면제되는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김진욱은 1999년 대검찰청 등의 조폐공사 파업 파괴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었다. 당시 조폐창 통폐합 계획에 반대해 조폐공사 노조가 파업을 벌이다가 탄압을 못 이기고 패배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가 기자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노조의 패배가 자신들의 작품이라고 자랑했다가 그것이 보도돼 특검까지

갔었다. 그러나 이미 1998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김진욱이 파업 파괴자들을 단죄하는 일에 열성을 발휘했을 리 없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는 진형구가 구속 기소됐었으나, 오히려 특검은 파업 파괴 공작을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 플레이로 결론을 내려 (연루 의혹을 받던) 대검찰청·대전지검·대전노동청 등에

모조리 면죄부를 줬다. 당시 검찰은 대검 공안부가 수사 대상인 이 특검의 검찰 몫 파견 검사로 공안통인 서울지검 부장검사 황교안을 보냈었다. 특검의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이끌려 갔다. 노동계와 엔지오 등의 추천으로 특검팀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항의하다가 결국 특검팀을 사퇴했었다.

우파의 부패만이 문제인가

공수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정치적 부패를 재벌과 전통적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 국가 관료들, 조종동 같은 우파 언론들의 유착 구조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패의 원조라고 부를 만한 세력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국가 형태가 독재적 국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로 변화해 온 지금도 정경 유착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 첫째,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부패의 양상도 변했다. 가령 과거 일당국가 시절에는 정치권력자가 우위에 서서 기업들에 정치자금을 요구했다. 지금은 상호거래 성격이 훨씬 강하고, 기업들도 보험용으로 한 정당 과만 거래하지 않는다. 정부는 여러 특혜가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기업들을 옥박질렀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한다. 다른 한편, 정계·관계·언론계에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이 유행하는가 하면, 모피아, 원전마피아 등 예전보다 다양한 정부 부처에 “관피아”라는 말이 생겼다. 정치인, 관료, 자본가들 간 연결망의 양상도 더 복잡적이고 복잡해진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1998년 집권하고부터, 특히 3번의 집권을 거치면서 지배계급의 차악 처지를 완전히 벗어났다. 자본주의 수호와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서 민주당도 우파 못지않다. 민주당도 정치·경제 권력

의 핵심부이자 부패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강력한 한 축이 됐다.

가령 1월 12일 가슴기 살균제 재판에서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부당한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가슴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을 연장 대상으로 제외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공교롭다.

한국에서는 부패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퇴임 후 구속되지 않은 경우는 박정희처럼 비명횡사하거나 이승만처럼 바로 망명을 떠난 경우, 김영삼·김대중처럼 재임 중에 이미 진자식들과 측근들이 대신 구속된 경우, 퇴임 후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의 경우가 있다.

정경 유착 유형의 권력형 부패가 독재적 국가자본주의의 유산이 아님을 김영삼 이후 정권의 부패상에서 알 수 있었다. 노무현 이후 비밀스런 정치자금의 운용이 점점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퇴임 후에도 권력과 부를 유지할 목적의 뇌물 거래는 멈추지 않았다.

권력 교체기에는 연결망 내 세력 균형에 재조정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라인이 형성되면서 균열이 생기고, 흔히 과거의 관계에 대한 폭로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때면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재벌 회장들도 구속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지난 1년여간 정부·여당이 검찰 또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과정을 볼 때, 국가(통치기구들의 총합) 내의 세력관계가 우파에 비해 열세인 것도 아니다. 민주당도 국군기무사 등이 연루된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우파야당이 최근 무능해서 더 그렇겠지만, 민주당을 대하는 재계의 태도도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권한 남용, 지위를 이용한 치부(뇌물, 불법 투자 등), 부패 혐의의 조직적 은폐 등에서 민주당도 구 여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 출신 중 전 환경부(김은경)·법무부(조국) 장관 등이 권력형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전 국무총리(이자 현 집권당 대표) 등의 뇌물수수 의혹이 드러났다. 청와대 출신으로는 조국(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이었던 백원우·최강욱 등이 모두 비리 무마 의혹과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다.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 1명은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있고, 이진아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핵심 의혹 대상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기소는 피했지만) 수사 대상이다. 조국, 백원우 등이 기소돼 있는 유

재수 검찰 무마 의혹 건에서 전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과 행정관인 천경득은 (용케 기소는 피했지만) 검찰 무마 청탁을 한 청와대 인사들이다(김경수 경남지사도 청탁을 함). 지난해 총선 결과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윤건영은 정치자금 관련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미향 의혹도 만만찮았다. 그런데 문재인과 청와대는 이들 모두를 옹호했다.

한때 개혁의 기수처럼 여겨졌던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들과 참여연대 등 유력 엔지오들도 대부분의 의혹들에서 민주당 관련자들을 감싸는 태도를 취했다. 조종동만 문제라는 식의 담론이 젊은 세대한테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 데도 말이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은 공수처가 정권 초에 인기를 끈 적폐 청산 수사 같은 강력한 반부패 수사를 하기보다는 현 정부에 불리한 수사들을 이첩시켜 묵히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성역 없이 권력층을 수사할 인물들을 공수처 검사로 선발할지도 의심의 대상이다. 행정부(군부와 국정원 등 포함),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 7000여 명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유독 여권이 그중 3분의 1도 안 되는 ‘검찰 개혁’에서 명분을 찾은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자본주의는 부패를 고무한다

부패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자본주의 자체가 부패를 고무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자본들이 서로 이윤 경쟁과 자본 축적에 몰두하는 체제다. 경쟁에서 패배하면 자본으로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은 자본들 간의 다툼을 갈수록 치열하게 만든다.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이를 위해 분식회계나 주가 조작을 저지르고, 정부 투자를 받으려 하거나 또는 벌어진 사고나 부패 혐의를 덮으려고 고위 관료나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 자본주의 사회에 결괴지상주의나 실용주의적 태도와 생각이 갈수록 만연한 것은 자본주의적 경쟁이 사회를 그렇게 구조화해 사람들을 몰아간 결과다. 정경 유착 부패가 단순히 국가자본주의나 정실 자본주의의 유산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유산인 탓이다. 부패는 경쟁적 축적의 이면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신화와 달리 자본은 여전히 국가에 의존하고, 자본들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큰 이익을 얻는다. 재벌 개혁론자들이 칭송하는 이른바 ‘주주 중심 경영’은 단기 실적 압박이 더 커서,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주가 조작 등 부패를 부추긴다. 또한 국가 정책들은 임금 억제처럼 노동계급을 전체적으로 쥐어짜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특정 자본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정경 유착 시도는 더 조장된다.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반부패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자본주의 질서를 그대로 둔 채 부패를 척결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것은 사기(또한 위선) 아니면 공상이다.

가끔 언급되는 이탈리아의 마니 폴리에 수사를 봐도 알 수 있다. 1992년 2월 밀라노 검찰청 검사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가 사회당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된 마니 폴리에 수사는 2년 동안 정·재계 인사 4500여 명을 기소해 1200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 당시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수사로 기민당·사회당 연립 정부가 몰락하는 등 충격을 겪었지만, 결국 더 부패한 베를루스콘니 정부가 등장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수사는 중단됐다. 이탈리아는 지금도 정·재계와 심지어 마피아 조직까지 연루된 범죄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이라고 다를까? 독일에서 재통일의 후광 등으로 19년이나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은 부패 정치자금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 의혹은 확대돼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인 프랑수아 미테랑에까지 미쳤다. 우파인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헬리버튼 스캔들은 자본주의 권력자들의 부패가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오바마 정부도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은폐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이라며 밀어붙인 동기와 실질적 결과를 보건대, 문재인인의 공수처는 명백한 사기극이다. 따라서 진보·좌파의 일각이 그저 부패는 나쁘다는 개념만을 근거로 공수처는 지지할 만한 개혁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자본주의에서 부패만 떼어내어 제거할 수도 없거니와, 심지어 좌파 정부도 자본주의를 개혁·진보화할 수 없다는 것이 앞서 집권했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프랑스, 브라질 등)의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부패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고 싶다면 자본주의 자체를 정조준해야 한다.



사진 출처 Tyler Merder/블리커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극우 시위대 이번 난동으로 트럼프 지지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은 세를 과시했다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극우·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하다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김준호

1월 6일 미국 극우가 수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과 미국 곳곳에서 벌인 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인종차별적 극우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쳐들고 나치의 구호를 새긴 옷을 입은 극우 시위대가 미국 정치의 심장부를 해집는 유례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본지가 거듭 지적했듯, 트럼프가 결집시킨 극우 운동이 커다란 정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 준 일이었다.

이번 무력 시위로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에서 극우·파시스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드러났다. 6일 극우들은 워싱턴 DC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뉴멕시코·인디애나·조지아·캔자스·오하이오·오레곤주(州) 등지에서도 폭력적인 난동을 벌였다. 수십 년 동안 분열해 있고 정치 무대 외곽에 밀려나 있던 극우·파시스트들이 전국적

으로 조율된 행동을 벌일 만한 세를 갖췄음을 과시한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추락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중간계급 사람들이 그 성장의 토대가 됐다.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기성 체제에 분노하지만, 노동자 운동이 약하면 우익의 선동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위기가 악화하고 기성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들은 트럼프와 극우가 내세운 '아웃사이드'·반(反)기득권 기치에 이끌렸다. 그래서 전염병 대유행 초기부터 “경제 재가동” 무력 시위를 벌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MAGA) 운동에 적극 참가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이번 난동은 ‘포퓰리즘’에 홀린 노동계급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워싱턴 DC 난동 참가자 다수가 비교적 유복한 소사업가·소자산가·전문직이었다.(전·현직 군인·경찰도 있었다)

트럼프 자신이 우익의 축 구실을 했

다. 트럼프는 6일 시위를 직접 부추겼을 뿐 아니라, 지난 4년 내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며 천대받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좌파를 비난했다.(관련 기사 본지 337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위를 높이다’)

트럼프

그 덕에 온갖 극우 운동이 세를 넓혔다. 2017~2019년 사이에 백인 국수주의 혐오 단체들은 그 수가 55퍼센트나 늘었고 규모도 커졌다. 이들은 2020년에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를 비롯한 온갖 운동들을 공격하며 세를 굳히고, 트럼프 재선 선거운동 와중에 전국적 네트워크를 다졌다. 몇몇 극우 인사들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당선했고 이제 극우 시위대에 힘을 싣고 있다.

물론 미국 대기업들과 기성 정치권



사진 출처 Refuse Fascism

1월 10일 뉴욕 도심에서 열린 트럼프·극우 규탄 시위

압도 다수가 체제의 위기를 관리하려고 지금 당장 극우·파시스트의 손을 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이 때문에 이번 난동은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한 쿠데타는 아니다.)

하지만 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며 불안정성이 더 커지면 극우·파시즘이 성장할 위험도 커진다.

중도에 기대어 극우와 맞설 수 없다

이번 난동으로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처한 미국의 지배계급은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짓밟힌 민주주의의 성전”(의사당) 운운하는 개탄이 나오는 배경이다.(그러나 그런 개탄은 의사당이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졌고, 미국 노동계급에 대한 온갖 공격을 도모한 공간이며,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적 만행을 벌이기로 결정했던 곳을 무시한다.)

미국 지배층 주류는 ‘정상 체제로의 회복’을 공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만들기에 거의 일치단결해 힘을 쏟고 트럼프와 극우를 배척해 왔다. 물론 대기업들은 트럼프의 기업 감세 정책에서 득을 보고, 소수 기득권 인사들과 억만장자들은 트럼프 등장 전부터 ‘티 파티’ 등 공화당 내 우익 운동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지배층 주류는 트럼프가 극우 운동을 고무해 기존 지배 질서를 교란하는 것과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그런 자들 중에는 트럼프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도 있었다. 의사당에 난입한 극우 시위대가 “펜스를 목 매달아라” 하고 외친 배경이다.)

트럼프 이전으로 회귀하려 하는 이런 지배층 주류가 보기에, “대선을 훔치지 말라”며 반발하는 트럼프와 극우 운동은 성가신 존재일 것이다. 지금 나오는 트럼프 탄핵 논란도 바로 그런 공방의 맥락 속에 있다. 이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 시도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가 노동계급을 가혹하게 공격하고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위협하고 미국 대중을 재앙적 전염병에 내버려 뒀기 때문이 아니다. 트럼프가 기존의 미국 자본주의·제국주의 질서를 교란했기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난동에서 봤듯 트럼프를 탄핵해도 그가 남긴 극우 운동을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화당의 ‘진정한 트럼프주의’ 성향 극우 의원들은 극우 난동을 강력 옹호하고 탄핵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 이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도모한다는 공화당 지도부의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를 두고 “진정한 트럼프주의” 의원들은 사실상 제3당이 됐다”고 평했다.

이들은 새 정부 하에서도 대중이 겪을 쓰라림을 오른쪽에서 이용해 계속 기반을 굳히려 이런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로써 극우의 세력 형성을 도우려는 것이다.(관련 본지 기사 342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대선과, 트럼프가 일으킨 정치적 지각 변동’)

파시즘을 분쇄할 노동계급 저항이 필요하다

그런 저항의 좋은 조짐이 있다. 1월 10일 1만여 명이 뉴욕 도심을 행진하며 트럼프와 극우를 규탄했다. 뉴욕 지역 연대체 ‘인종차별·파시즘에 맞서 일어서자’가 이날 시위를 주최했는데, 이 연대체는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을 비롯해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지역 단체들이 함께 모인 곳이다.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 더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그 운동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 위기의 고통 전가에 맞서 작업장

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21’ 회원인 버지니아 로디노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급은 파시스트 단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위기의 고통을 겪으며 의존할 데 없다고 여기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우리 주장에 동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마르크스21’은 지금의 정치적 공간을 이용해 공동전선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1월 6일 난동 때는 질서 회복을 **트럼프에게** 애걸했던 바이든은 이제 극우의 “반란”, “쿠데타”를 다잡으려면 (특히 FBI 등) 연방정부 산하의 경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에 맞서 수천만 명이 참가한 대중 항쟁을 벌였던 미국 대중에게, 이제 경찰력 강화를 지지하라는 것이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극우 폭력에 정당방위를 한 시위 참가자 마이클 레이노엘을 살해한 바로 그 연방 병력에게 말이다.

사실, 미국 국가와 지배계급 주류가 이번 난동을 실질적 ‘쿠데타’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난동 참가자들에 대한 대량 체포·살해, 통제에 실패한 군정에 대한 혹독한 징계가 없다는 점 자체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미국 지배계급 주류가 이번 난동을 쿠데타 위협으로 보지 않음을 반증한

다.(‘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가 무장한 채 의사당에 난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이든이 “쿠데타” 운운, 탄핵 시도 등으로 진정 단속하고 싶은 것은 (바이든 정부가 재건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중도’에 대한 공격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인종차별·극우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이용해 그런 일을 하려 한다. 역사적으로도 미국 민주당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분노를 돌려서 선거와 집권에 이용해 온 전력이 있다.(관련 기사 본지 315호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 그런 점에서,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진보파 정치인들이 의회 내에서 트럼프 탄핵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중 운동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식이 못 된다. 미국 민주사회당(DSA) 지도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지역 수준에서는 몇몇 DSA 활동가들이 거리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이당이 가진 민주당 의존적 개혁 전략의 한계와 연관이 크다.(관련 기사 본지 322호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바이든과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대중의 고통에 아랑곳 않는 전 세계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만의 번영을 구가하는 사회다. 그리고 바이든은 새 정부와 국가 권력을 강화해서 바로 그런 체제를 운영하는 통치 수단을 지키려 한다.(관련 기사 본지 350호 ‘대의제 민주주의는 왜 언제나 대중을 저버릴까?’)

극우의 위협에 맞서 ‘중도’(민주당)와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대중의 독립적 저항을 고무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조직적 노력으로 파시스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마르크스21’이 성명에서 지적했듯, “극우에 맞선 광범한 단결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파시즘의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광범한 대중 운동을 건설하면서도, 인종차별과 절망의 운동인 파시즘을 낳는 근원을 설명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반자본주의 좌파를 강화해야 한다.”

이들은 자본가들처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노동계급처럼 집단적으로 투쟁할 능력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이들은 심각하게 짓눌리곤 한다.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을 통해 본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1월 6일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군중 속에는 트럼프 지지자, 극우 음모론자, 노골적인 파시스트로 이루어진 혐악한 무리가 있었다. 그 중핵에 나치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위대 안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6MWE”(600만으로는 부족했다)의 약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키는 말이다)가 적힌 후드티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맞서려면, 이들이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파시즘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공언히 어떤 도식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다. 파시즘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해서 다른 우익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위협성을 가버이 여기자는 것은 아니다. 파시즘에 더 잘 맞서기 위해 파시즘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파시즘은 단순히 권위주의, 인종차별, 편견의 고약한 형태가 아니다. 파시즘은 정치적 반대자와 소수자에게 폭력과 테러를 가할 수 있는 대중 운동을 거리에서 건설하려고 애쓴다. 파시즘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적 권리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사회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평상시”에 자본가 계급은 그들의 국가와 경찰력에 기대어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허울, 지배계급 사상을 전파하는 언론,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때 안전 밸브 구실을 하는 “안전한” 야당 등을 이용해 통치를 정당화한다. 위기 시기에는 이런 통상적 수단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몇 십 년간 각국 지배계급은 전투적인 노동계급 대중 운동과 혁명의 위협에 직면했다. 결국 일부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운동을 분쇄하려고 다른 대중 운동, 즉 파시즘에 기댔다. 파시스트들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선거에 출마하지만, 민주적 선거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적은 없다. 1930년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 1920년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의 집권 모두 지배계급이 질서·안정성 회복을 바라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다. 그렇다고 파시즘이 지배계급의 부속물이나 지배계급 운동인 것은 아니다. 파시즘에는 고유의 기반과 동학이 있고, 거짓된 “혁명적,” “반(反)기득권적” 연사를 한다. 파시즘의 사회적 기반은 “프티부르주아”에 뿌리가 있다. 이 중간계급 층에는 소자본가, 소상공주, 일부 자영업 전문직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본가들처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노동계급처럼 집단적으로 투쟁할 능력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이들은 심각하게 짓눌리곤 한다.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을 통해 본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토마시 텡글라-에반스

1월 6일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군중 속에는 트럼프 지지자, 극우 음모론자, 노골적인 파시스트로 이루어진 혐악한 무리가 있었다. 그 중핵에 나치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위대 안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6MWE”(600만으로는 부족했다)의 약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키는 말이다)가 적힌 후드티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에 맞서려면, 이들이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파시즘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공언히 어떤 도식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다. 파시즘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해서 다른 우익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위협성을 가버이 여기자는 것은 아니다. 파시즘에 더 잘 맞서기 위해 파시즘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파시즘은 단순히 권위주의, 인종차별, 편견의 고약한 형태가 아니다. 파시즘은 정치적 반대자와 소수자에게 폭력과 테러를 가할 수 있는 대중 운동을 거리에서 건설하려고 애쓴다. 파시즘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적 권리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사회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평상시”에 자본가 계급은 그들의 국가와 경찰력에 기대어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허울, 지배계급 사상을 전파하는 언론,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때 안전 밸브 구실을 하는 “안전한” 야당 등을 이용해 통치를 정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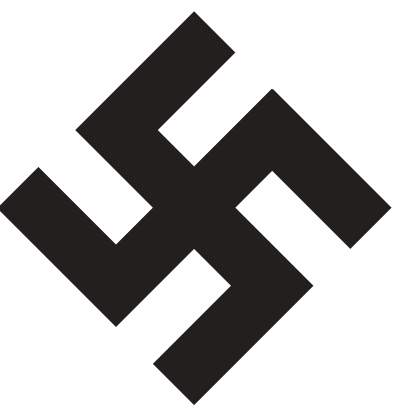
위기 시기에는 이런 통상적 수단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몇 십 년간 각국 지배계급은 전투적인 노동계급 대중 운동과 혁명의 위협에 직면했다. 결국 일부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운동을 분쇄하려고 다른 대중 운동, 즉 파시즘에 기댔다.

파시스트들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선거에 출마하지만, 민주적 선거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적은 없다. 1930년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 1920년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의 집권 모두 지배계급이 질서·안정성 회복을 바라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다.

그렇다고 파시즘이 지배계급의 부속물이나 지배계급 운동인 것은 아니다. 파시즘에는 고유의 기반과 동학이 있고, 거짓된 “혁명적,” “반(反)기득권적” 연사를 한다.

파시즘의 사회적 기반은 “프티부르주아”에 뿌리가 있다. 이 중간계급 층에는 소자본가, 소상공주, 일부 자영업 전문직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본가들처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노동계급처럼 집단적으로 투쟁할 능력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이들은 심각하게 짓눌리곤 한다.



강력한 노동자 운동이 있으면 이들은 좌경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노동자 운동이 없으면 오른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들의 고통을 탓할 희생양을 우익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독일의 나치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예컨대 헝가리에서는 중간계급이 2007~2008년 금융 공황 당시 막대한 빚에 짓눌리고 파탄나면서 파시스트 정당인 요빅당이 성장했다.

파시즘 운동은 거리 운동으로 힘을 키운다. 그러므로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운동

현재 미국 지배계급은 파시즘에 기대어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파시스트가 위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임기 시작부터 파시스트들에게서 공공연히 환심을 사려 했다.

트럼프는 극우 음모론의 구세주가 됐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은근히 극우·파시스트들을 유용한 불랑배처럼 취급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기반 일부를 더 우경화시켜서 파시스트들에 상당한 청중을 제공하기도 했다.

극우·인종차별 운동의 중핵에 나치가 있고, 그보다 덜 극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종류의 우익 운동은 더 “주류”로 이끌릴 수도 있지만, 나치로 이루어진 중핵이 성장해 운동을 정치적으로 더 강경하게 만들려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파시스트들이 하려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난동은 진짜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벌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파시스트들은 자신의 운동을 건설하면서 때로 더 대답하고 선언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들은 1919년 밀라노에서 사회주의 신문 인쇄기를 박살내고 39명을 살해했다.

당시 파시스트들은 세력이 작았다. 하지만 그런 폭력적 행동은 파시즘 운동의 지향을 천명하는 선전 효과를 냈다. 무솔리니는 이 사건을 “내전의 첫 번째 사건”으로 찬양했다.

이번 의사당 난입은 트럼프 임기의 마지막 한 숨이었다. 하지만 극우·파시스트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크> 2737호 번역 김준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반복되는 아동 학대 자본주의가 낳는 끔찍한 비극

전주현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공분이 일었다.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CCTV에 잡힌 정인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정인이는 모진 학대로 뼈가 으스러지고 장이 찢어져 배 안에 피가 가득 고인 상태였다. 성인도 참을 수 없는 “최고 수위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정인이는 울지도 않은 채, 힘 없이 축 늘어져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전문가들의 소견으로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무감정 상태”까지 다다른 것이라고 한다. 다음 날 정인이는 다시 강한 충격을 받아 내부 장기가 파열됐고, 아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고통을 끝낼 수 있었다.

경찰의 방기

많은 사람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정인아 미안해”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또 다른 정인이는 없어야 한다’는 염원이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의사·양부모 지인에게서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경찰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번 허망하게 날려 버린 것이다.

경찰은 정인이 몸 곳곳에 난 시커먼 멍 자국을 보고도 “마사지를 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양부모의 황당한 해명만 듣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러 골절과 심각한 영양실조를 우려한 소아과 의사의 학대 의심 소견도 무시했다. 그러고도 ‘정인이 학대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경징계만 받았다.

이에 ‘경찰도 학대 공범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약 30만 명이 참가했다. 대통령 문재인조차 “기초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 이제 더는 없어야 한다 추모객들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가 안치된 공원묘지를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

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월 6일, 경찰 청장이 공식 사과했고,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됐다.

그러나 성난 여론이 가라앉기는커녕, ‘정인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재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은 문재인인의 “검찰 개혁”과 경찰 수사권 강화 방안에 대한 반감과 공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키우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정부는 반복되는 아동 학대 대응 방안으로 “대대적인 특별 점검”과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에 정인이의 학대 의심 신고는 묵살됐다. 정인이 사망 직후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문재인은 정인이 사망 8일 후 “학대 위기 아동 발굴에 성과를 낸 경찰의 업적”을 추켜세우며 ‘노고를 치하’했다. 경찰 권한 강화를 위한 “경찰 개혁”(혹은 “검찰 개혁”)명분 쌓기에 몰두하며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행태를 묵인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정부의 미흡한 아동 학대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아동 학

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상은 생색내기 수준의 찢끔 개선에 머무르기 일쑤였다. 최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촘촘한 학대 근절 대책” 운운하며 제시한 추가 방안도 감시와 수사 강화에 초점이 있을 뿐, 실효성 있는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에 매우 인색하다.

미흡하고 기만적인 정부 대책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이게도 지난해 7월 세운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의 예산 703억 원을 2021년 예산 배정 때 전액 삭감했다. 예산 지원 없는 아동 학대 대응 방안은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다.

가령, 피해아동 분리 조치 이후 대책이 미미하다. 올해 3월부터 아동 학대 신고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분리될 수 있다. 피해 아동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나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마련된 쉼터는 75곳으로 최대 500명만 수용 가능하고 이미 포화 상태다.

최근 정부가 쉼터를 13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2019년 아동 학

대 발생 건수가 3만 45건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쉼터에 머물지 못하는 아이들은 보육원과 가출청소년 시설 등을 전전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한 이행을 약속한 ‘아동 학대 조사 및 상담 업무 공공성 강화’ 방안(2019년에 발표)도 예산 삭감으로 진행이 더디다. 이 정책은 아동보호전문기관(대부분 민간위탁) 업무를 2022년까지 지자체에 이관하고,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14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11월 기준으로 정부가 권고한 인력 배치 기준(연간 아동 학대 신고 50건 당 1명)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가 많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여 곳에만 배치된 상태다. 대개 1~3명 정도 배치되는 데, 전담 공무원이 1명뿐인 지자체도 67곳이나 된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전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제 신고가 올지 몰라 24시간 대기해야 하

고 응급조처에서 사후 점검까지 소수의 전담 공무원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려면,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 필요한 지원을 책임져야만 한다. 분리 조치 이후 피해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쉼터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아동 해당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일자리 알선·생활비와 양육비 지원 등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과 조울증 치료, 상담 등도 제공돼야 한다.

아동 학대 조사와 상담이 꼼꼼하게 이뤄지고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되려면, 아동 학대 업무 인력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복지부가 올해 안에 전국에 총 664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필요 수준에 건뎌 많이 모자라다(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전국에 900여 명이었고, 이조차 매우 부족한 규모다). 살인적 업무량 때문에 벌써부터 전담 공무원 “기피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전담 공무원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아동 학대 50건 당 1명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이 기준은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하면 2~3배 높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과 수사 담당 경찰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 학대는 성 학대·신체 폭력·유기와 방임 등 범위가 매우 넓고,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숙련된 경험이 중요하다.

피해 아동 지원과 아동 학대 업무 관련 인력 등을 확대하려면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현재 한국의 아동 보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퍼센트로 OECD 평균(1.3퍼센트)의 7분의 1 수준이다. 더구나 아동 학대 예산의 대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자금(벌금과 민간 출연)과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불안정하다.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동 학대의 근본적 원인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방안이 “예방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적합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문 수준의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한 정인이 양모에게 중형을 내

려야 한다는 대중의 심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아동 학대 처벌 기준이 상향돼 왔지만, 아동 학대 건수가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

아동 학대를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안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공 복지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빈곤과 가난이 아동 학대 요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모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해 방임과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경제 위기와 팬데믹

으로 빈곤 아동과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보편적인 아동 복지가 확충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이 학대의 원인인 듯 언급했다. 그러나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또한 정부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기 위한 술책이기도 하다. 물론 민간 단체 중심의 무분별한 입양 제도는 아동 학대를 포함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입양 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인이는

입양 절차가 강화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 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입양을 승인했다.

빈곤, 불평등, 소외

‘계모’나 ‘입양’을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학대 가해자 중 친부모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는다.

아동 학대는 악마 같은 부모들의 기질이나 특징으로 환원할 수 없다. 아동 학대는 자본주의 사회에 물질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 시설(소년원 등), 교회, 교육 시설 등에서도 발생한다.

자본주의 같은 계급 사회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이 구조화돼 있고 소외가 만연하다. 양육이 개별 가정에 내맡겨진 구조에서 일부 부모들이 가족 내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아이들을 학대한다. 아동은 취약하기에 자본주의가 가하는 소외와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뒤흔린 성인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기 쉽다.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비틀어진 인간 관계를 변혁하려면 아동 학대의 근본 원인 자본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정진희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은 듯하다.

낙태죄 일부 조항의 효력이 중지됐지만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낙태를 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입법 공백’이 예고되자 지난해 말 대한산부인과 의사사회 등 보수적인 의료계 단체들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했다. 조건 없는 낙태 시술은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고 22주 이후 시술은 거부하겠다고 했다. 정부 개정안보다 더 제한적인 지침이다.

의료계 지침은 권고 사항이라 모든 의사가 이를 따르지는 않겠지만, 많은 의사가 낙태를 선별해 시술할 것이다.

1월 8일 MBC 보도를 보면, 낙태시술 기준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심지어 임신 8주 이내에만 된다는 곳도 있었는데, 의료계 지침보다도 더 짧다. 임신 20주도 가능하다는 병원이 있었지만, 수백만 원의 수술 비용을 요구했다.

임신 초기조차 낙태 비용이 높다. <조선일보> 보도(1월 9일자)를 보면, 서울에 있는 병원의 낙태 수술비는 임신 10주 내외인 경우 100만 원가량이었다. 경기도 소재 병원들은 70만~80만 원이었다.

높은 비용 때문에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극소수에 불과한)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낙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다.

낙태죄 효력 상실로 올해부터 낙태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낙태 의약품은 없는 상태. 해외 직구로 낙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된다. 수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낙태 방법을 한국 여성들은 음성적 방식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기간과 사유 제한 없이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시술(약물 요법도 포함해)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2018년 7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정부와 민주당이 달라진 게 아니다

지난 연말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안이 처리되지 않자 여성운동 내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는 듯하다.

지난해 12월 30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과 정의당·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온라인 토론회(‘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에 권인숙, 박주민, 남인순, 윤미향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인사말을 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연발연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해 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권인숙은 낙태 문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향적” 시각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과 한참 다른, 현재 안에서도 훨씬 퇴행적인 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권인숙은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덕분에 자신의 법안과 박주민 법안이 나왔

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안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다. 임신 6주 이내에만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터무니없는 법안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국민의힘 의원안보다 약간 나을 뿐, 정부안 역시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한 적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를 과장하는 것이 부정직한 이유다.

권인숙 자신은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과 제한 없는 낙태 허용 법안을 냈지만,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이고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남인순 의원조차 권인숙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인 박주민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담겼다. 10월 말 공개된 초안에서 주수 제한과 의사 거부권 조항 같이 논란이 된 부분을 모두 들어냈지만, 생색내기 발의에 가깝다. 게다가 “원칙적”이라

는 표현을 넣어서 정부안과 절충할 여지도 남겼다.(권인숙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남인순은 박주민 법안에는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자체는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한 바가 없다. 낙태권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몇몇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의 말을 듣고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사면 얘기로 우파에 아부하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가 낙태죄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기에, 낙태죄 처벌 조항을 되살리는 입법이 불가능하지 않다. 민주당이 낙태죄 조항을 되살리지 않아도 의료법 등으로 의료진을 처벌할 수도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기회주의적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낙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법안(정부안이나 정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민주당도 출산율

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보수파들과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여성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생각을 위험하다고 여긴다.

여성 엔지오들이 주도하는 연대체 ‘모낙폐’는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옹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낙태죄를 유지할 뜻을 드러냈지만, 청와대 비판은 삼갔다. 지난해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 개정안이 나오자 정부를 비판했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성명을 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허용 범위를 일부만 넓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 개혁 배신으로 대중의 불신을 받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서 실질적 개혁을 성취할 수는 없다.

우파와 문재인 정부 모두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전진해야 한다. 낙태권 투쟁은 그 일부로서만 성장할 수 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이현주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임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하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사실혼 관계로 수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윤리지침은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넓히긴 했지만, 여전히 비혼 여성은 배제한다.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률

적 뒷받침을 받지는 못한다. 법적으로 보조생식술의 대상은 ‘난임부부’로 한정돼 있다. 모자보건법(제11조 2항)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허용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비혼모가 인공출산을 원해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당시 민주당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슈가 될 때 잠깐 관심을 보였을 뿐 논의 결과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정상 가족? 한국에서도 혼인으로 맺어진 남녀와 그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형태는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비혼 출산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

일부 기독교·우파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립서비스조차 못마땅해 한다. 이들은 비혼 출산이 ‘건강한 사회의 근본’이 되는 결혼과 가족제도를 교란시키고 훼손한다고 떠들어댄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이란 본디 남녀의 결합으로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성교의 결과로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거스르는 비혼 출산에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의 이성애 중심 일부일처 가족제도는 인간의 본성도, 영원불변한 제도도 아니다.

여러 인류학적 증거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급 발생 이전 사회에서 일부일처제가 사회의 기초 단위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초기 인류 사회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었다.

남녀 모두 성적으로 폭넓은 자유를 누렸다. 성관계의 목적은 가족 내 생식에 국한되지 않았고, 남녀 간의 성관계만이 ‘정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계급 사회 이전에는 사람들의 삶이 규정된 노동 시간에 따라 짜이지 않았는데, 이는 사람들이 많은 자유 시간 동안 매우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변했다. 잉여가 생겨나고 이를 통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했다. 직접 생산하는 이들과 생산물을 관리하는 이들 사이의 분업은 차츰 계급의 분화로 이어졌다. 일부일처제는 지배계급이 된 소수의 잉여 통제권자들이 잉여를 상속할 필요성에서 비롯했다. 그래서 여성의 성적 자유도 통제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일부일처 가족제도는 인류 역사의 특정 시점에 물질적 변화에 조응해 발전한 사회적 산물이다.

비혼 출산 반대 주장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변하는 현실에 비취봐도 편협하다. 한국에서도 혼인으로 맺어진 남녀와 그 자녀로 이뤄진 핵가

족 형태는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비혼 또는 이혼 한부모 가정, 사실혼 커플, 동성 커플 등 가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피임·낙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성이 (즐거움이나 친밀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족과 재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관념도 도전받아 왔다.

선택

비혼 출산 반대자들은 비혼 출산이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반윤리적” 행위라고도 주장한다. 시험관 수정 방식이 배아 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생명 파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비혼 출산만이 아니라 인공출산 자체를 반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난임 증가 등으로 보조생식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 왔다. 아이 갖기를 원하지만 임신에 실패한 많은 여성과 커플들에게 인공출산 기술의 발전은 희망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출산은 비혼 여성들이나 동성커플, 트랜스젠더들이 자신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자녀를 얻을 가능성도 열어준다.

즉 인공출산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재생산에 대해 더 많이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문제이지, 인간 존엄 파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배양 접시 위의 배아 세포를 살아 있는 인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배아 세포는 인간과 같은 독립적 인격체는 아니다.

비혼 출산에 반대하는 자들은 여성이 낙태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부정하는데,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반대하는 것은 ‘여성 선택할 권리’임을 보여 준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거나 자연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비자연적인 것으로 치자면 인간 사회에서 비자연적인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자연적인가?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집념과 여성과 성에 대한 편협한 태도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물질적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핵가족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에서 축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현재와 다음 세대 노동력을 기르는 일은 개별 가정의 여성과 남성에게 떠맡겨져 있다. 이런 현실은 노동계급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는 무거운 부담과 고충을 안기지만, 기업들과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는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준다. 노동력 재생산에 드는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인 남녀와 그들의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이 ‘정상적’이라는 관념, 임신과 출산, 양육이 여성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는 관념도 부추겨진다. 이것은 집 안밖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을 낳고, 혼외 출산에 대한 천대와 차별로도 이어진다. 부부가 헤어지는 문제(이혼)에 국가가 이혼숙려제 따위를 뒤서 간섭하는 것,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의 여러 정책도 핵가족 모델을 기초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혼인 여부와 자녀의 유무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을 좌우한다. 반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없는 동거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나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법적 부부에 한정돼 있다.

비혼모들은 차별과 멸시로 고통받는다. 육아와 돌봄이 개별 가정에 떠넘겨져 있는 상황에서 비혼모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매우 어려운데다, 차별과 멸시 때문에 괜찮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다.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도 100만 원이 채 안 된다(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이유가 지배계급의 필요 때문은 아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척박한 외부 세계와는 다른 나만의 안식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개인들의 삶에 가하는 압력들은 이런 기대를 거둬 무너뜨리고, 심각한 경우 때로는 가족을 끔찍한 폭력과 학대의 공간으로 만들기도 한다.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하라

비혼 출산은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출산을 원치 않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도록 압박받고,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들은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리고, 결혼과 가족이라는 협소한 기준에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가 옥여넣어지는 자본주의 사회다.

누구든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를 가질지 말지, 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법률을 고쳐쓰는 것뿐 아니라 국가가 양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인공출산에 대

오늘날 가족은 변해 왔다. 1996년에만 해도 43만 건이던 혼인 건수는 2016년에 20만 건대로 추락했다. 그에 따라 결혼과 가족, 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변해 왔다. 동거 커플 등 결혼 제도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고 있다. 한국보다 변화 추세가 빠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혼외 출산이 크게 늘어 왔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곳들도 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집 바깥에서 일하며, 이런 변화에 따라 양육과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일부 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노동계급 가정의 필요에 한참 못 미친다.

국가의 지원이 일부 늘었어도,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별 가족에 양육과 돌봄을 떠넘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혼과 가족, 여성과 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편협한 관념은 그 형태를 달리할지라도 자본주의 하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성적 관계도 자본 축적의 필요가 우선되는 이런 사회구조 하에서 제약받고 뒤틀리기 쉽다.

한 지원도 확대돼야 하고, 비혼 사실이 인공출산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선택과 자유를 확대하려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근본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양효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껌데기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에 끔찍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1월 11일 광주의 한 페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이 사고를 처벌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도 3년 유예됐다.

산업재해의 76.6퍼센트가 이러한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대다수 재해를 중대재해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기업주들에게 경각심은커녕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존에 노동계 요구에 비해 처벌 수준과 범위도 대폭 낮아졌다. 중대재해(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와 제조물이나 시설에서 벌어지는 시민재해 모두)를 일으킨 기업과 기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안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발주처와 임대인은 책임과 처벌에서 제외됐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기업주의 법 위반이 반복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가 벌어지면 유죄로 추정)도 삭제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계가 10만 국민청원으로 요구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차 떼고 포 떼면서 핵심 조항을 후퇴시켜 왔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은 단독 통과시킨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재계 핑계를 대는 것도 책임 회피일 뿐이다.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신이 자본가 계급에 주요 기반

을 둔 친기업 세력이기 때문에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이다.

출발로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이번 에 통과된 법을 두고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성과도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안이 통과된 날 논평을 내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등 성과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분 의의를 사 주면서 “성과는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이후 사업과 투쟁을 통해 채워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반면,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법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유사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파 일부도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법이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름만 남은 껌데기 법안에 성과를 사 주는 것은 중대재해를 막는 데에도,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평가는 후퇴가 있더라도 어쨌든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과 연결돼 있다. 법안 통과 전부터 김종철 대표는 “한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열려져 있गे 논의”하겠다고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앞으로 한동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노동존중



누더기 법으로는 이런 참사 처벌 못한다 1월 11일 광주의 한 페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벌어진 끼임 사망 사고 현장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경총 등은 ‘사업 못 하게 하는 법’이라며 우는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구, 주류 양당 등은 이 법을 근거로 또다시 기업주 처벌에 미온적인 현실을 정당화하기 쉽다.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재해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운동의 주요 세력들이 지금 법안 통과의 의의를 사 주면,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에도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다. ‘이미 취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됐는데 또다시 개정이나’는 우파들의 반발에 일관되게 맞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법안을 “이분법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과와 한계를 함께 보는 ‘공정한 평가’가 못 된다.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 차서 일부 진보적 조항을 압도하고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전체적인 취지에 대한 평가를 묻개는 것일 뿐이다.

사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뒤늦게라도 통과시키려 한 것은 정부 지지율 하락과 박근혜·이명

박 사면 논란으로 진보층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개혁 제스처라도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핵심 조직들이 껌데기뿐인 법안에서 애써 성과를 사 주는 것은 정부의 위기 탈출 시도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투쟁보다는 입법에 기대는 문제점

이런 점에서 일부 좌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평가를 수용한 것은 더욱 뼈아프다. 문재인 정부의 껌데기뿐인 법안 통과를 비판하고 운동의 대의를 알려, 제대로 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기보다 온건한 세력과의 공조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불안정노동철페연대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은 12월 18일 <노동과 세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내용만 꼭 담으려고 했다. 정말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한 내용도 있다. 그

런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기업의 책임을 줄여보려 하는 시도가 정말 안타깝다.”

입법 과정에서 통과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요 NGO 같은 온건한 세력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류 정당들이 받을 만한 수준으로 법안을 삭감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기 마련이고, 좌파가 이에 타협해야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건한 세력이 불필요하게 후퇴한다면 좌파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단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건한 세력에 대한 비판을 삼가게 되면 점점 더 온건화 압력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기층 투쟁을 강화하는데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입법과 제도화에 방점을 두는 운동으로 기울 때 생기기 쉽다. 입법에 중점을 두게 되면 개혁주의 세력과의 공조에 무게를 뒀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쉽다.

사실 그동안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 법안이 없어서 기업주들이 면죄부를 받아 온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일가가 처벌 받고 막대한 구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보듯이, 기층의 압력이 거대하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었다.

물론 현행법에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더 핵심은 국가 기구 자체가 기업과 긴밀히 유착해 있어서 기업 처벌에 미온적이고, 산재 처벌에서 면죄 영역이 넓은 것이다.

그러므로 좌파라면 무엇보다도 기층에서 투쟁을 건설해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후퇴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주 52시간제 회피 꼼수

3개월짜리 ‘파리목숨’ 단기계약직 늘리는 현대중공업

김지태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됐다. 우파 언론들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이 기업을 어렵게 한다며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계속 장시간 노동으로 빠빠지게 일하길 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을 확대해서 주52시간제가 시행돼도 사용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런 방향 속에서 사용자들은 임금을 낮추거나 비정규직을 늘려서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측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1차 하청 노동자를 줄이고 고용이 훨씬 더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을 늘리고 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해 준 상황을 이용해 소규모 업체의 단기직 고용을 늘린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은 말했다. “지난해 건조부에만 11개 단기업체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3개월밖에 계약하지 않습니다. 건조부 외업(야외 작업) 쪽에서는

전체 하청 노동자 중에 1차 하청 노동자가 70퍼센트 정도였는데, 단기업체가 늘어 1차 하청이 절반 정도입니다.”

단기 계약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소한의 보장도 해 주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청 사측이 제공하는 명절 상여금, 연말 성과금 등에서도 제외된다고 한다.

이것은 기존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사측은 원청이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보너스와 학자금을 하청업체가 지

급하도록 떠넘겨서 노동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안 그래도 만성적인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업체 사장들이 보너스를 제대로 주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압박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사측은 일이 많을 때는 바짝 일을 시키고 일이 없을 때는 책임 지지 않아도 되는 단기계약직을 늘려서 비용을 아끼고,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도 압박하려 한다.

탄력근로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앞으로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실제로 조선소 하청업체 사장들(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협의회)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시행 반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열어 준 길을 따라 현대중공업 사측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하는 이유이다.



택배사와 정부의 외면 속 계속되는 과로사

신정환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사들은 역대급 특수를 누렸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1퍼센트 폭증했다.

그런데도 택배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약속한 분류 인력 6000명 투입 비용(약 750억~900억 원)을 아까워하며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거리 두기 단계 강화로 택배량은 더욱 늘었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택배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50퍼센트 넘게 폭증했다. 그 한 달 동안 택배 노동자 4명이 연달아 쓰러졌다. 안타깝게도 그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무려 16명이나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노동자들이 항의에 나서자, 택배사들과 정부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었다. 택배사들은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당일 배송 강요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을 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죽음의 '새벽 배송'

주요 택배사들(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은 인력 확충을 약속한 만큼도 안 했다. 매우 적은 인원만 더디게 투입하고 있어 과로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심지어 CJ대한통운 사측은 분류 인력을 투입할 때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원청이 인건비의 일부를 대리점 소장에게 책임지라고 떠넘기고, 대리점 소장은 자기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직접 돈을 각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인력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는 1월 11일에야 처음 분류 인력이 투입됐는데, 몇 명 안 돼요. 그러니 분류 작업하는 분들



처우 개선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택배 노동자가 늘고 있다 경기도 한진택배 이천여주지점

도, 택배 기사들도 일이 많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심야 배송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회사가 밤 10시 이후 배달 기입만 전산으로 막고, 실제로 일은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10시 전에 배달한 것처럼 먼저 전산 기입을 해서 고객에게 ‘배송 완료’ 문자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고객들이 ‘왜 물건이 없냐?’고 전화를 걸어와 설명하느라, 시간도 까먹고 스트레스만 늘었어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23일 배송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한진택배 노동자는 새벽 6시까지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정부는 택배사들의 약속 위반, 사기극을 방치하며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택배사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택배 산업 관련법(생활물류법)에서도 원안에 있던 인력 총원 관련 조항을 폐기했다. 전국택배노조 등은 현재 ‘공짜 노동’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는 분류 작업을 사측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택배 분류 작업의 사측 책임) 요구했었다. 그러면 인력 총원을 강제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그러겠노라 약속했지만, 택배사들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정부는 대신 정부·여당 주도로 택배 노·사가 참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에서 미진한 부분을 논의해 나가자고 노조를 설득했다. 지난해 12월 초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택배사들과 정부 모두 무책임한 태도로 인력 총원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택배사가 또 뒤통수를 쳤고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가 진전될 줄 알았는데, 노조가 안이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밥그릇은 싸움 없이는 얻어낼 수 없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투쟁 준비에 나서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투쟁 준비에 나섰다. 노조는 1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분

류 인력의 즉각 투입과 인건비 전액 사용자 부담, 원청 택배사와의 직접 교섭 등 요구를 걸고 투쟁을 결의했다. 앞으로 택배사들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배달 물량이 폭증하는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조합원 파업을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스스로를 결속시키며 투쟁과 조직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업무를 도맡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다. 그 속에서 불거진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와 투쟁도 지지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말 노조 결성 후 첫 투쟁에 나선 롯데택배 노동자들은 단호

하게 싸워, 파업 사흘 만에 수수료(임금) 인상과 부당한 벌금 제도 폐지 등을 따냈다.

한진택배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조건 개선 투쟁에 나섰다. 최근 전국택배노조 이천한진지회회는 현장 투쟁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분류 인력을 늘릴 수 있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 해고도 철회시켰다. “조합원 수도 계속 늘고 있어요. 매주 새롭게 지회가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다시 투쟁 준비에 나선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임현우 전국택배노조 이천한진지회장은 말했다. “대의원대회 분위기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구를 지지해 주는 만큼, ‘한번 해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도 쟁의 결의

정부가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도 택배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며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위탁 택배 노동자들은 이에 불만을 터뜨리며 민간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싸움 준비를 하고 있다.

우정본부는 그동안 정규직 집배원 인력을 묶어 두고 특수고용직인 위탁 택배원을 늘려 왔다. 인건비를 최소화하려고 위탁 택배원의 임금 수준을 억제하면서 말이다.

위탁 택배원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조차 일정 수준의 인건비를 넘기지 않으려고 물량을 제한적으로만 준다. 그러면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정규직 집배원들은 인력 부족 속에 넘쳐 나는 우편물을 처리하느라 허덕인다.

“택배 물량은 늘었는데, 우정본부는 위탁 택배원들과 약속한 기준 물량(하루 190건)조차 준수하지 않고, 남는 물량을 집배원들에게 전가합

니다. 집배원들은 힘들고 위탁 택배원들은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도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비용 절감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윤종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월 1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월 말 전국택배노조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